

레미콘 업체 영업중단...건설현장 올스톱 위기

광주·전남 회원사 1군 건설사와 단가 협상 이견...시멘트 공급 중단 원자재값 상승·건설경기 침체 여파...주초 공장 재가동 협상 나설 듯

광주·전남 레미콘업체가 전격 가동을 중단해 건설현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레미콘 납품단가에 반영 해주기로 한 건설업체가 경기 악화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레미콘 업체가 조업을 중단한 것이다. 5일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대부분 회원사가 지난 4일부터 영업중단에 들어가 건설 현장에 레미콘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레미콘 회사들은 레미콘 납품단가를 놓고 1군 건설사와 타결점을 찾지 못하자 가동을 중단했다.

레미콘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루베(1㎡당 납품단가(현재 9만 5000원)를 1만 2200원 가량 인상해달라고 건설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서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레미콘 업체는 지난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총 루베당 단가를 1만 원 가량 올렸다.

레미콘 업체는 납품단가 인상에도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건설업체에 추가 단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건설업체도 레미콘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지난해 연말까지 단가를 추가 인상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레미콘 업체는 건설업체에서 최근까지 뚜렷한 인상 방안을 내놓지 않자 결국 납품중단에 돌입했다.

레미콘 업체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에 상차 거부 협조를 구했고, 전운련이 운송 거부에 동참했다. 레미콘 차주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조업중단에 가세했다.

레미콘 업체는 원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12% 올랐고, 골재 가격도 7~8%선에서 인상에 무

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설업체는 레미콘 업체와 입장이 다르다. 최근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는 등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레미콘 납품단가가 올리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한데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채권관리를 위해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절박감도 내세우고 있다.

광주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충분히 납품 단가를 인상했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단가를 올리면 건설업체 전반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레미콘 업체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주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초 레미콘 업체는 협상 타결전까지 조업정지 조치를 풀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었지만, 업체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이번 주 초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건설업체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장기간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 광주·전남 건설현장이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체도 힘들지만 시멘트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레미콘 단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납품중단을 풀겠지만, 협상 타결되지 않으면 굳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장을 가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장가동이 멈춰선 광주시 남구 송암동 한 레미콘 업체 앞에 7일 오전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염전 노예' 영상 유투버 신안군 명예 훼손 혐의 군민들 고소로 검찰 송치

신안군에서 제작한 '염전 노예' 관련 영상이라며 유투브에 올린 유투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신안경찰은 지난해 10월 30대 후반 유투버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신안군 비금면 신의도 등지를 찾아다니며 '염전 노예' 관련 영상 6편을 촬영해 유투브에 올려 신안군 지역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상에서 신안 주민들에게 접근해 "염전에 노예가 잡혀있는 것이 아니냐",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등 말을 걸고, "주민들과 경찰이 한통속으로 염전노예를 숨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신의도 주민들에게 염전 이야기를 꺼냈더니 자리를 피했다",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있고, 경찰서를 떠나고 나니 경찰관이 나와 A씨를 지켜봤다"는 등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신안군민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해당 영상의 회당 조회수는 47만~181만에 달하는 등 신안군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신안 홍도 인근 바다 조업 어획량 축소 기재 중국 어선 2척 나포

신안 홍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입한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7일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44km 바다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척씩 저인망 중국 어선 A·B호(각 117 t·승선원 9명씩)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 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삼치 등 2만 2020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530kg이 누락된 1만 869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해역에 들어올 당시 멸치 1만여kg이 적재된 상황임에도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 중국어선 40척을 나포해 담보금 34억원을 징수했다"며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투신 20대 육군 일병 숨진채 발견

광주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아래에서 20대 군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광주남부경찰과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3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 아래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타지역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 휴가 나온 A씨는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37m 아래 도로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극단적 선택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던 점과 '군대 가기 전 밤 독촉으로 인해 힘들어했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남구는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극단 선택이 잇따라 지난해 2020년 난간을 2m로 높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에도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

인권위 "학생 휴대폰 수거는 권리 침해"...학교는 중단 요구 불수용

광주 서구 고교 교내 사용 제한 교육부 고시 들어 학칙 개정 거부

광주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가 학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이 "등교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진정을 냈다.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학칙으로 정규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담임 선생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휴대전

화를 사용하다 발견되면 일정 시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5일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교육부 고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

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내용이다.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학교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면서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